

勞 動 經 濟 論 集  
第39卷 第4號, 2016. 12. pp.57~78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김 보 민\*\*· 송 헌 재\*\*\*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 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공무원연금, 가구경제활동, 소득, 자산, 소비

### I. 서론

보험료율은 상승시키고 연금지급률은 하락시키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2015년 5

---

논문 접수일: 2016년 11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2월 25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26일

\* 저자들은 논문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제 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bokim@snu.ac.kr)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heonjaes@uos.ac.kr)

월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난 15년간 이루어진 개혁과 마찬가지로 큰 폭의 재정적자 발생 상황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개혁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였다. 오래 전부터 미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률은 높이고 수익률은 낮추는 개혁을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한 것처럼 공무원연금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2010년과 2015년 연속으로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개혁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월등히 높게 설계된 구조가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는 원인이 되었다(서원석·최무현,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하여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연금액이 얼마나 더 많은지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sup>1)</sup>

그런데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적 연대 기능이 중요한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은 인사행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고용주인 국가가 근로자들인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은급(gratification pay)에 기원을 두고 있다(김중양·최재식, 2004). 이러한 전통에 따라 독일의 경우, 현재에도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국가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은퇴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 제도는 민간기업보다 낮은 급여와 퇴직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하여 고용주인 정부가 보상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금구조의 변화는 공무원의 미래소득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0년 및 2015년 공무원연금 지급률 조정으로 요약되는 개혁은 공무원의 미래연금자산에 대한 큰 변화를 발생시키고 이는 당장 공무원들의 현재 소비와 저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미래의 잠재적인 공무원 집단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저수준의 급여와 은퇴 후 고수준의 연금은 안정적인 미래소득에 높은 가중치를 둔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연금의 삭감으로 인해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현재 지향적이고 위험회피 성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질

1) 김태일(2004)의 연구 이후 김상호(2008), 김태일·박규성(2014)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공무원 국민연금 가입자 사이에서 생애소득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거나, 또는 오히려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수 있다.)<sup>2)</sup>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까지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정이 공무원 집단에게 어떠한 경제 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관한 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이하 공무원연금 가구)의 가구 경제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연금 납부 가구(이하 국민연금 가구)의 가구경제 실태와 소비행위를 비교하여 공무원연금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공무원연금 제도의 개혁이 가져올 공무원 집단의 행태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연금가입 유형에 따른 가구경제 실태를 비교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로서의 의의도 갖는다.<sup>3)</sup>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분석 자료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가계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어지는 제III장에서는 가계 변수 중 가구 소득과 가구 순자산을 분석했고, 제IV장에서는 가구 소비 및 항목별 소비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 II. 분석 자료 및 기초통계량

###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패널은 2008년에 전국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5개 연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원표본 유지율이 79.9%에 이를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패널 데이터이다.

재정패널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조사에서는 가구원의 인적 현황·주택 및 자동차

2) 사회적 관점에서 위험회피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국민의 혈세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3) 임경득·문형표(2003)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을 계산하고 기대연금자산이 가계저축과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저축을 구축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소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가구수

연도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2007	145	2,561
2008	187	2,793
2009	167	2,560
2010	156	2,495
2011	162	2,736

자료: 재정패널 1차 연도~5차 연도.

차 보유현황·가계지출현황·이전지출 및 이전소득·복지현황·자산 및 부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가구원조사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연금 및 보험지출현황·연간소득·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세 납부 유형과 소득공제현황을 조사한다. 이와 같이 재정패널에서는 가구원조사 설문에서 가구원별 소득원천(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 등)에 따른 소득을 별도로 조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개인의 연간소득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원들의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 변수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4)</sup>

연금관련 변수로 재정패널은 1차 연도 조사부터 개인설문에서 연금에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를 묻고 있으며, 별도로 연간 납부금액을 조사하였다. 2차 연도 조사부터는 은퇴 이후 매년 받을 것을 예상되는 연금 금액을 설문하였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유형과 연간 수령한 총 금액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의 가구경제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재정패널 1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공무원연금만 납부하는 가구(이하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만 납부하는 가구(이하 국민연금 가구)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본 분석에 사용된 각각의 가구의 수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국민연금 가구에는 자영업자 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4) 가구조사 설문에서는 가구소득의 구간을 묻는 간단한 질문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조사 설문 결과로부터는 가구소득 수치를 구할 수는 없다.

## 2. 인구통계학적 변수

가구경제변수의 인구통계학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주의 나이, 가구주의 학력, 여성 가구주의 비율, 그리고 가구원수를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표 2> 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 나이는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를 볼 수가 없다. 둘째, 가구원 수와 취업 가구원 수에서는 가입연금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가구원 수는 공무원연금 가구가 유의미하게 0.25명 많았지만, 반대로 취업가구원 수는 국민연금 가구가 조금 더 많았는데 이로부터 즉 국민연금 가구가 공무원연금 가구에 비해 맞벌이하는 부부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보다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1.75년 많았고,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2%가량 낮았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은 대졸자에 근접하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 가구는 학력은 전문대졸 연령에 평균적으로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가구의 여성 가구주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sup>5)</sup> 이는 여성 공무원의 근로소득이 가구의 주된 소득원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표 2> 가구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변수 기초통계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가구주 나이	44.78 (0.54)	45.22 (0.17)
가구주 학력(교육연수)	15.14 (0.16)	13.39 (0.05)
여성 가구주 비율(%)	7.47 -	9.47 -
가구원 수	3.63 (0.07)	3.48 (0.02)
취업가구원 수	1.32 (0.03)	1.45 (0.01)

주: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5) 2014 안전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이고, 교사를 제외하더라도 32.9%를 차지한다.

### 3. 가구경제 변수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가구경제 변수는 서영빈·송헌재(2015)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의 합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과 정부이전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다. 사적이전소득은 친척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주된 요소이고 공적기관 이외의 대상으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지원금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은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이자, 주식의 매매차익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부동산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집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은 축의금, 부의금, 증여, 상속 등의 나머지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가구총자산의 경우,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가구총부채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 사적인 부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구성하였다. 금융자산은 은행예금이거나 주식, 채권, 저축성보험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자산은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 총액이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가구원 수( $N$ )에 따른 소비규모 차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를  $\sqrt{N}$ 으로 나누는 가구 동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환산한 소비지출 변수를 고려하였다. 다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변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거나 0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모든 변수는 모두 2010년 가치로 전환하였다.

〈표 3〉 가구 유형별 가구경제 변수 기초통계

(단위: 만원)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가구 연소득	6,164 (158.7)	4,862 (55.63)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25,270 (1,391)	26,070 (587.1)
월평균 소비지출	140.3 (2.818)	126.9 (1.016)

주: 1)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월평균 소비지출은 동등화 지수로 조정하였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구 연소득, 가구 순자산, 월평균 소비지출의 기초통계량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부표 1>에는 분위별 기초통계량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공무원연금 가구의 연소득은 국민연금 가구의 소득보다 1,302만 원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보다 열악하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이는 국민연금 가구에는 농어업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가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종과 비교대상이 되는 민간 그룹은 100인 이상 비농업부문 민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광의의 관리사무직<sup>6)</sup> 근로자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한다. 즉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조립직, 단순노무직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sup>7)</sup> 또한,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실시하였던 공무원 보수 현실화 정책으로 인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sup>8)</sup> 공무원의 통상적인 준거 집단인 고학력 화이트칼라 직종의 근로자보다는 임금수준이 떨어지지만, 평균의 비공무원 취업자보다는 보수수준이 높다. 이는 공무원 가구의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일반의 국민연금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은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한편,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가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800만 원 높다. 공무원연금이 정부가 재원을 보전해줌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이고 소득 보장률도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낮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 즉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무원연금 가구가 국민연금 가구보다 저축의 유인이 낮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두 집단의 절대적인 수치의 순자산의 차이는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구가 국민연금 가구보다 월평균 소비지출이 13.4만 원 높으며 연간 161만 원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비지출의 차이의 원인은 앞에서 본 순자산의 차이의 원인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9)</sup> 공무원연금의 존재로 인하여 공무원연금 가구는 미래에 매우 안정적인 소득 원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가구가 소비지출을 늘리고 결국 저축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6) 표준직업분류(제6차 개정 대분류 기준)에서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을 광의의 관리사무직이라 한다.

7)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전 행정안전부)가 발주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했던 각 연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다.

8) 다만 각 연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참조하면 2004년 96%까지 올라가 있던 공무원 보수 근접률은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15년 현재 83.4%까지 떨어져 있다.

9) 가구 동등화 지수를 적용하여 환산한 소비지출 변수를 사용했기에 저축이 소득과 소비의 차이는 아니다.

〈표 4〉 가구 유형별 연간 연금 납부액 및 기대연금 수령액

(단위: 만원)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연간 연금 납부액	120.9 (4.8)	48.5 (0.6)
가구 수	312	3457
표본 수(N)	813	10,062
연간 기대연금 수령액	1,954 (77.9)	1,003 (13.0)
가구 수	253	3133
표본 수(N)	533	7,663

주: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다음으로 <표 4>에서는 공무원 가구의 소비지출을 늘리고 순자산을 줄이게 만드는 원인이라 추측되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비교하였다. 재정패널은 각 연금 종류별로 연간 납부금액을 조사하였고, 2차년부터는 가구원 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예상 연간 연금 수령액을 물어보았다. 이를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연간 납입 금액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약 2.5배 높은 대신에 예상 연간 수령액 또한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기대연금자산과 생애보험료를 계산하여 분석한 장원진·송헌재(2016)의 기초통계량 결과와 유사하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생애보험료는 국민연금 가구보다 약 2배 높고, 기대연금자산은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대신 예상 수령액도 두 배가량 높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보다 실질적으로 가구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한다. 다만, 본 연구의 자료는 2000년 및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부터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실제 총 보험료를 과대 반영하고 실제 기대연금자산을 과소 반영할 수 있다.

10) 한편, 김상호(2008)는 1988년 입직 공무원, 2000년 입직 공무원, 2008년 입직 공무원의 총 보험료와 생애연금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추정치를 각각의 대응하는 민간 취업자와 비교하였는데, 총 보험료는 공무원이 12~15% 더 납부하는 대신에 생애연금 급여는 공무원이 민간 근로자보다 무려 2.5배 이상 심지어 3배까지 더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의 연구이기 때문에 개혁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 연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 Ⅲ. 가구소득 및 가구 순자산 분석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 사이의 경제행태 차이를 단순히 가구주의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장에서는 기초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를 같이 통제하면서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혹은 가구주의 공무원 여부가 가구소득 및 가구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를 분리하여 가구소득 함수와 가구 순자산 함수를 추정하여 두 집단 사이의 행태 차이를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가계변수 추정식에 가구주 나이, 가구주 학력, 여성 가구주 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소를 통제하였다.<sup>11)</sup> 나이 혹은 호봉에 따른 한계증가율의 체감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이의 제곱항 역시 추정식에 포함시켰다. 가구의 크기에 따른 차이 역시 반영하기 위하여 가구원 수 역시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통합(pooled) 선형회귀(OLS) 분석법을 사용하고, 가구별로 군집(cluster)하여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추정하였다.<sup>12)</sup>

<표 5>는 가구소득 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가구주의 나이와 학력, 성별을 통제한 후에도 공무원연금 가구 여부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주가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567만 원 높게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연소득이 국민연금 가구보다 높은 사실은 일정 부분 가구주의 학력과 여성 가구주 비율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이를 통제하여도 공무원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속해 있는 광의의 관리사무직 직군의 임금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만약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와 같이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광의의 관리사무직 직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가구와 공무원연금 가구를 비교하면 이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sup>13)</sup>

11) 가구소득의 경우 일종의 민서(Mincerian) 함수라고 할 수 있다.

12) 이러한 분석으로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의 행태 차이에 대한 인과성을 찾기보다는 두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력을 찾으려는 데 분석의 목적이 있다.

13) 본 연구에서 공무원과 현재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패널 1~5차년도 자료에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수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표 5〉 가구 연소득 OLS 추정 결과

설명 변수	전체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가구주 나이	168.6*** (33.1)	335.2*** (91.2)	160.4*** (34.4)
가구주 나이 제곱	-1.033*** (0.360)	-2.371** (0.982)	-0.970*** (0.374)
가구주 학력	385.7*** (20.7)	329.3*** (57.5)	386.7*** (21.6)
가구원 수	462.5*** (52.4)	255.7** (115.8)	473.6*** (55.0)
여성 가구주	-466.3*** (116.7)	-369.9 (356.1)	-460.5*** (121.3)
공무원연금 가구	567.1*** (156.4)		
가구 수	4,229	313	4,036
표본 수(N)	13,835	811	13,024

주: 1) \*\*\* p<0.01, \*\* p<0.05, \* p<0.1.

2)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추정식에는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일반적인 임금 추정식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전체 가구소득은 증가하고 대신 증가의 속도는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학력 역시 뚜렷하게 소득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약 470만 원 가까이 소득이 낮다. 공무원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를 분리하여 소득 함수를 추정하여도 위의 결과와 비슷한 추정결과가 나온다. 다만, 국민연금 가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구의 소득 함수의 추정계수와 전체 가구의 소득 함수의 추정계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 함수는 일부 다른 측면이 관측된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와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 사이에 임금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공무원 임금 체계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은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가구와는 달리 나이에 따른 효과가 학력에 따른 효과보다 크다. 공무원의 경

우 동일집단 내에서 학력의 차이가 국민연금 가구보다 크지 않고, 공무원의 임금체계가 학력보다는 나이 혹은 경력에 따른 호봉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4)</sup>

가구 순자산 함수 추정 결과는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 집단의 가구 순자산 함수의 모양은 전반적으로 앞에서 추정된 소득 함수와 비슷하다. 가구주의 나이가 들수록, 가구주의 학력이 오를수록 가구 순자산이 증가한다. 가구원 수 역시 순자산과 양(+)의 관계에 있다.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의 순자산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약 910만 원 낮지만, 소득 함수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소득 함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표본에 국민연금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된 전체 가구의 순자산 함수의 형태는 국민연금 가구와 거의 같다. 그렇지만 순자산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가구가 가지는 특이성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학력을 제외하고 순자산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관한 추정계수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보다 그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하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약 8,600만 원이나 낮은 수준이다. 기초통계량 분석과는 다르게 공무원 더미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속한 광범위한 관리사무직군의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일 수 있다. 특히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두 가구 집단 사이에서 약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순자산의 차이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가구에 비하여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납부하고, 즉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고, 대신에 미래에 받을 연간 연금이 평균적으로 900만 원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구는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의 결과 약 8,600만 원의 금액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금액 차이가 장원진·송헌재(2016)의 연구에서 공무원연금의 기대자산과 국민연금의 기대자산의 평균 차이인 약 7,600만 원과 비슷하게 나타난 점은 흥미롭게 볼 수 있다.<sup>15)</sup>

14) 호봉체계가 공무원의 임금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지만, 직급이 학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학력이 공무원연금 가구소득에 양(+)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배우자 역시 학력이 높아서 더욱 가구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표 6〉 가구 순자산 OLS 추정 결과

설명 변수	전체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가구주 나이	1,729*** (297)	1,197 (1,209)	1,790*** (307)
가구주 나이 제곱	-6.528** (3.183)	-1.782 (13.820)	-7.058** (3.280)
가구주 학력	4,534*** (211)	2,885*** (496)	4,626*** (222)
가구원 수	1,586*** (431)	974 (1,032)	1,599*** (452)
여성 가구주	-914 (1,299)	3,516 (3,301)	-975 (1,356)
공무원연금 가구	-8,657*** (1,444)		
가구 수	4,201	309	4007
표본 수(N)	13,493	794	12,699

주: 1) \*\*\* p<0.01, \*\* p<0.05, \* p<0.1

2)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추정식에는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함.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의 순자산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요인으로 상속 재산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7>에 있는 상속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자. 16) 상속 경험의 비율은 두 가구 집단 사이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속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보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상속자들은 약 6,000만 원을 상속받았지만 국민연금 가구의 상속자들은 약 2억 2천만 원을 상속받았다. 아직 상속을 받지 않았거나

15) 한편, 2009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한 김상호(2008)의 연구는 약 3억 8,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만큼 공무원연금의 기대연금자산이 크다고 했으며, 2000년 이전의 자료를 이용한 임경묵·문형표(2003)는 공무원연금의 기대자산이 국민연금의 기대자산보다 약 1억 8,000만 원이 더 높다고 추정하였다.

16) 재정패널에서는 3차 연도 자료에서는 가구원들의 생애 상속과 증여의 경험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7〉 가구 유형별 상속 경험 유무 및 상속금액(재정패널 3차년도)

(단위: 만원)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상속 경험 비율(%)	8.98	9.38
	-	-
상속금액(상속경험 가구)	6,000	22,352
	(9,751)	(60,792)
상속금액(전체 가구)	506.1	1,991
	(3,208)	(19,196)

주: ( ) 안은 가구 표준편차임.

실제로 상속받을 것이 없어서 못 받은 가구들의 상속 금액을 0으로 처리하여 전체 평균을 구해보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평균 상속 금액은 500만 원이고 국민연금 가구의 평균 상속금액은 2,000만 원으로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약 4배 더 많다. 이러한 상속금액의 차이가 국민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보다 월등히 높은 현상을 일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흥미로운 사실은,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 사이에 상속 경험 비율은 비슷하지만 실제 상속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상속받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상속할 것이 있는 미상속 가구를 고려하더라도 상속금액에 있어서 두 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공무원연금 가구는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더라도 도움의 크기가 작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가구 소비

가구소비 함수도 가구소득과 가수 순자산과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통제하여 추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형적인 소비 함수처럼 가구소득과 순자산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때 가구 소비를 동등화 지수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사

용하는 가구소득도 동등화 지수로 나누어 주었고 이에 따라 가구원 수는 추정식에서 제외하였다. 추정방법으로는 먼저 제Ⅲ장과 마찬가지로 통합(pooled) 선형회귀(OLS) 분석법을 사용하고, 가구별로 군집(cluster)하여 추정계수의 표준오차를 구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가구의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 추정도 적용하였다.<sup>17)</sup> 고정효과 모형 추정을 적용할 때는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인구통계학적 독립변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소비 함수의 추정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된 전체 가구의 소비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통합 OLS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소득, 순자산을 통제하여 추정한 공무원연금 가구주 더미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기초통계량 분석과는 다른 결과이다. 소득과 순자산이 증가할수록 소비지출은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소득 및 자산의 한계소비성향의 크기는 크지 않다.<sup>18)</sup>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를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두 집단의 소비 함수는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 함수 및 순자산 함수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올라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증가하였다. 여성 가구주 여부는 가구 소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그런데 가입연금별로 분리하여 가구 소비 함수를 추정하면 중요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무원연금 가구만 따로 소비 함수를 추정하면 여성 가구주에 관한 추정 계수가 매우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 가구의 경우 여성 가구주 더미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여성이 가구주이면 월 소비 지출을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약 19만 원 늘린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원인으로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에서 가사노동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와 대응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지출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지만 왜 공무원연금 가구에서만 이

17) 가구주가 바뀌거나 가구주의 가입 연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8) 인구통계학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연 12만 원 혹은 월 1만 원 소득이 증가할 때 약 1,800원 만큼 소비가 증가한다. 순자산이 1,000만 원 증가하면 가구 월 소비 지출은 약 3,300원이 증가한다. <표 5>에서 보았듯이, 가구주의 학력과 연령이 가구소득을 결정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표 8>에서 가구소득 추정계수의 크기는 항상 소득(permanent income)의 영향을 제외한 일시 소득(temporary)의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 모두 가구주의 나이 혹은 경력이 늘어나면서 가구 소비지출이 증가하는데 공무원연금 가구의 증가분이 국민연금 가구보다 상당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소득 함수 추정결과는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나이 또는 경력에 강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 가구 순자산 함수 추정 결과는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우, 연령에 따른 소득 증가가 국민연금 가구에 비하여 명확하고 퇴직 이후 받는 공무원연금의 안정성과 높은 보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는 연령이 늘어날 때 순자산을 늘리는 대신에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국민연금 가구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sup>19)</sup>

다음으로 고정효과 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비지출이 국민연금 가구보다 10만 원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소득은 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산은 월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국민연금 가구의 추정된 소비 함수는 전체 그룹의 소비 함수와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공무원연금 가구는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순자산이 월 소비 지출에 양의 영향을 주었다.

다만, 고정효과 모형 추정의 식별은 가구 유형이 전환된 소수의 가구에 의한 것으로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분석대상 가구 중 다른 유형의 연금을 받는 가구로 전환한 비율을 정리한 <부표 2>를 참고하면, 분석 기간 중 공무원연금 가구 중 10.6%의 가구(59가구)가 국민연금 가구로 전환되었으며 반대로 국민연금 가구 중 약 1%의 가구(88가구)가 공무원연금 가구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가구들에 한하여 고정효과 모형은 공무원연금 가구 특성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집단에 한정된 효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을 선택한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월 지출은 약 10만 원이 높게 추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방법은 가구 간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고, 또한 가구의 숨겨진 특성과 공무원을

19) Ni and Seol(2014)은 한국 공무원의 소비의 소득 민감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의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많은 수당이 있고 월별 총보수의 변동성이 크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가구는 소비를 평탄화하지 않고 소비지출을 소득의 변화에 맞추고 있다.

〈표 8〉 월평균 소비 지출 추정결과

설명 변수	Pooled OLS			Fixed Effect		
	전체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전체	공무원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가구 연소득	0.015*** (0.002)	0.015*** (0.002)	0.015*** (0.002)	0.007*** (0.001)	0.008** (0.003)	0.007*** (0.001)
가구 순자산(백만원)	0.033*** (0.004)	0.033** (0.014)	0.033*** (0.004)	0.002 (0.006)	0.041** (0.020)	0.001 (0.006)
가구주 나이	4.778*** (0.369)	6.111*** (1.323)	4.733*** (0.382)			
가구주 나이 제곱	-0.046*** (0.004)	-0.059*** (0.014)	-0.046*** (0.004)			
가구주 학력	3.129*** (0.337)	2.128** (0.994)	3.174*** (0.344)			
여성 가구주	2.207 (2.066)	18.98*** (7.201)	1.490 (2.135)			
공무원연금 가구	-2.18 (2.58)			10.43** (4.35)		
가구 수	4,191	399	3,996	4,191	399	3,996
표본 수(N)	13,385	788	12,597	13,385	788	12,597

주: 1) \*\*\* p<0.01, \*\* p<0.05, \* p<0.1.

2)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가구 소비와 소득은 모두 가구 동등화 지수로 조정한 값을 사용하였음.

4) 추정식에는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내생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된 공무원 더미변수의 계수의 수치를 단지 공무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늘리는 월간 소비지출 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공무원연금 가구의 숨겨진 특성과 소비와 자산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존재가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지출을 국민연금 가구보다 10만 원이나 높게 지출시키는 원인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세부항목 별 소비지출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가구가 유의미한지 추정하였다. 세부항목별 소비지출이 0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모서리 해(corner solution)를 해결할 수 있는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각 세부항목별 소비지출도 월 소비지출처럼 동등화 지수를 적용하였고,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가구 연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표 9〉 소비지출 항목별 Tobit 추정: 공무원연금 가구 계수

소비 지출 항목		소비 지출 항목	
식료품비(월평균)	-0.813 (0.658)	공교육비(연간)	17.6 (16.8)
외식비(월평균)	-0.361 (0.477)	사교육비(연간)	7.8 (24.0)
주류비(월평균)	-0.431 (0.284)	보건의료비(연간)	13.2* (7.7)
담배 구입비(월평균)	-1.56*** (0.36)	기부금(연간)	68.2*** (11.2)
문화생활비(월평균)	0.337 (0.224)	경조사비(연간)	11.1*** (3.1)
여행비(월평균)	11.7 (8.1)	유류비	-0.781 (0.688)

주: 1) \*\*\* p<0.01, \*\* p<0.05, \* p<0.1

2) ( ) 안은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3) 추정식에는 가구주 나이, 가구주 나이 제곱, 가구주 학력, 여성 가구주 더미, 가구 연소득, 가구 순자산, 연도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나 보고는 생략하였음.

4) 각 세부항목별 소비지출과 가구 연소득은 가구 동등화 지수를 이용하여 조정하였음.

토빗의 추정 결과는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에 비하여 담배 구입비는 유의하게 낮았고, 보건의료비는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에 비하여 기부금, 경조사비의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는 국민연금 가구에 비하여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다. 즉, 담배와 같이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줄이고 건강 인적자본 축적에 주의를 기울인다. 또한, 공무원연금 가구가 국민연금 가구보다 연 68만 원 더 많이 기부하고, 연 11만 원 이상을 경조사비로 더 사용한 것은 공무원연금 가구가 국민연금 가구보다 이타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사회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비지출 특이성을 자세히 고찰해 보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향후에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sup>20)</sup>

20) 원래 이타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인가, 또는 공무원이 되어서 이러한 성격이 되었는가와 같은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연령에 더 많이 민감하며,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 함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 구축효과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가구의 상속자산의 크기가 비공무원연금 가구보다 작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통합 OLS 추정결과에서는 공무원연금 가구 여부가 월 소비지출을 늘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 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급여 구조는 공무원 재직 중에는 같은 학력수준과 능력을 가진 민간인에 비하여 급여가 낮고 은퇴 이후의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되어 있다. 즉 보수적이고 위험회피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적은 사람들 중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이타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의 안정적인 미래소득 보장을 급격히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들은 기존의 공무원들과 성향이 일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 가구와 국민연금 가구 사이에 존재하는 소득, 순자산 및 소비의 차이를 기초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면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의 존재가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행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엄밀한 모형과 자료를

이용하여 공무원과 비공무원 사이에 존재하는 위험회피 성향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계속 이루어질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가구의 경제행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신규로 입직하는 공무원의 성격을 예측하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의 변화 방향에 대하여 통찰을 줄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가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 [부 록]

〈부표 1〉 분위별 가구 유형별 가구경제 변수 기초통계

(단위: 만원)

	가구 연소득				가구 순자산				월평균 소비지출			
	공무원 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공무원 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공무원 연금 가구		국민연금 가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분위	2819.9	55.3	1112.7	14.5	1468.7	450.1	-1485.6	287.3	57.5	1.5	47.8	0.3
2분위	3672.6	19.4	2067.5	6.2	6964.2	116.1	3670.6	25.5	82.5	0.6	68.7	0.1
3분위	4258.2	15.8	2680.4	4.7	10317.2	92.9	6493.3	23.9	100.0	0.6	82.0	0.1
4분위	4765.2	19.6	3237.0	4.5	13221.9	100.8	9390.1	26.5	112.9	0.4	95.1	0.1
5분위	5342.3	21.4	3785.6	4.3	16223.8	115.9	12700.6	33.1	125.6	0.4	106.8	0.1
6분위	5925.3	22.0	4391.7	5.8	20224.0	115.9	16878.7	39.4	138.5	0.4	118.8	0.1
7분위	6607.2	24.4	5149.7	6.7	25628.9	242.0	22197.1	54.9	153.4	0.5	135.5	0.2
8분위	7396.2	33.5	6084.9	9.7	32467.0	252.5	30334.8	93.6	171.7	0.7	155.7	0.2
9분위	8826.4	87.2	7626.0	18.5	42964.0	580.7	46293.5	214.5	196.4	0.9	185.3	0.3
10분위	12100.3	326.8	12569.7	252.6	83680.4	4422.2	114444.2	2645.7	267.6	8.2	280.4	4.3

주: 1) 표준편차는 가구의 id로 clustering한 clustered standard error임.

2) 월평균 소비지출은 동등화 지수로 조정하였음.

〈부표 2〉 분석기간 중 가구 유형 전환비율(%)

	공무원연금 가구(이후)	국민연금 가구(이후)
공무원연금 가구(이전)	89.39	10.61
	[497]	[59]
국민연금 가구(이전)	0.96	99.04
	[88]	[9,078]

주: 1) [ ]는 표본 수임.

## 참고문헌

- 김상호. 「생애소득 관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경제학연구』 56권 3호 (2008. 9): 323-344.
- 김중양·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서울: 법우사, 2004.
- 김태일.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국행정학보』 38권 6호 (2004. 12): 111-129.
- 김태일·박규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비교분석: 공적연금개혁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권 3호 (2014. 12): 173-204.
- 서영빈·송헌재. 「중고령 가구의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재정학연구』 8권 3호 (2015. 8): 119-247
- 서원석·최무현.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9권 1호 (2010. 3): 83-108.
- 임경묵·문형표. 「공적연금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 문형표 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I)』, pp. 227-276.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장원진·송헌재.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기대자산이 가구저축에 미치는 영향」. 『경제 분석』 22권 3호 (2016. 9): 33-69.
- Ni, Shawn and Youn Seol. “New Evidence on Excess Sensitivity of Household Consump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3 (April 2014): 80-94.

---

abstract

---

## Analysis of Economic Behavior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Bo Min Kim\* · Heonjae Song\*\*

This study analyzes economic behavior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by comparison to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First,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income is higher tha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one. Second, household net assets of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 are smaller than the ones of national pension subscriber. Government employee pension could crowd out private household savings, and a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inherited more than a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Third, a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is also likely to expend more than a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 Both summary statistics and fixed effects estimates give significant coefficients to government employee's dummy. Government employee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s do not need to save more because they expect to receive a stable retirement pension which gives relatively higher compensation. Thus, they are likely to consume more tha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households.

Keywords: public officials pension, household income,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s

---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Korea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eoul